

수도권 對 지방 갈등 전선 확대

세종시 수정안 국회 통과 '산넘어 산'

“백년대계 선택”...정부·청와대 여론몰이 청와대 오찬 비수도권 단체장 강력 반발 與 친이-친박 갈등 증폭...野 공세 강화

세종시 수정안 후폭풍이 여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물론 '중앙권력 대 지방권력'의 전면전 양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안 처리는 여야와 지역 간의 대립을 떠나 이명박 정부의 국정 운영과 차기 대권 구도에 까지 영향이 예상된다. 이 점에서 정국에 격랑을 예고하고 있다.

▷세종시 여론전 총력=이명박(MB) 대통령은 세종시 수정안이 발표된 지 하루만인 12일 수정안 관철을 위한 직접 설득 행보를 시작했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간담회를 갖고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 것.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수정과 관련, 충청지역에 대해서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선택이었음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지역에는 역차별이 없도록 약속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발에서 “이 문제에 대해 1년 이상 고민 했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기로 했다)”며 “세종시 때문에 다른 지역에 지장 받지는 않을 것”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도 이날 오전 대통령 주례 보고에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향후 홍보방안을 보고했으며, 청와대 참모들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 수정안에 ‘백년대계를 위한 청사진’이라는 논리를 내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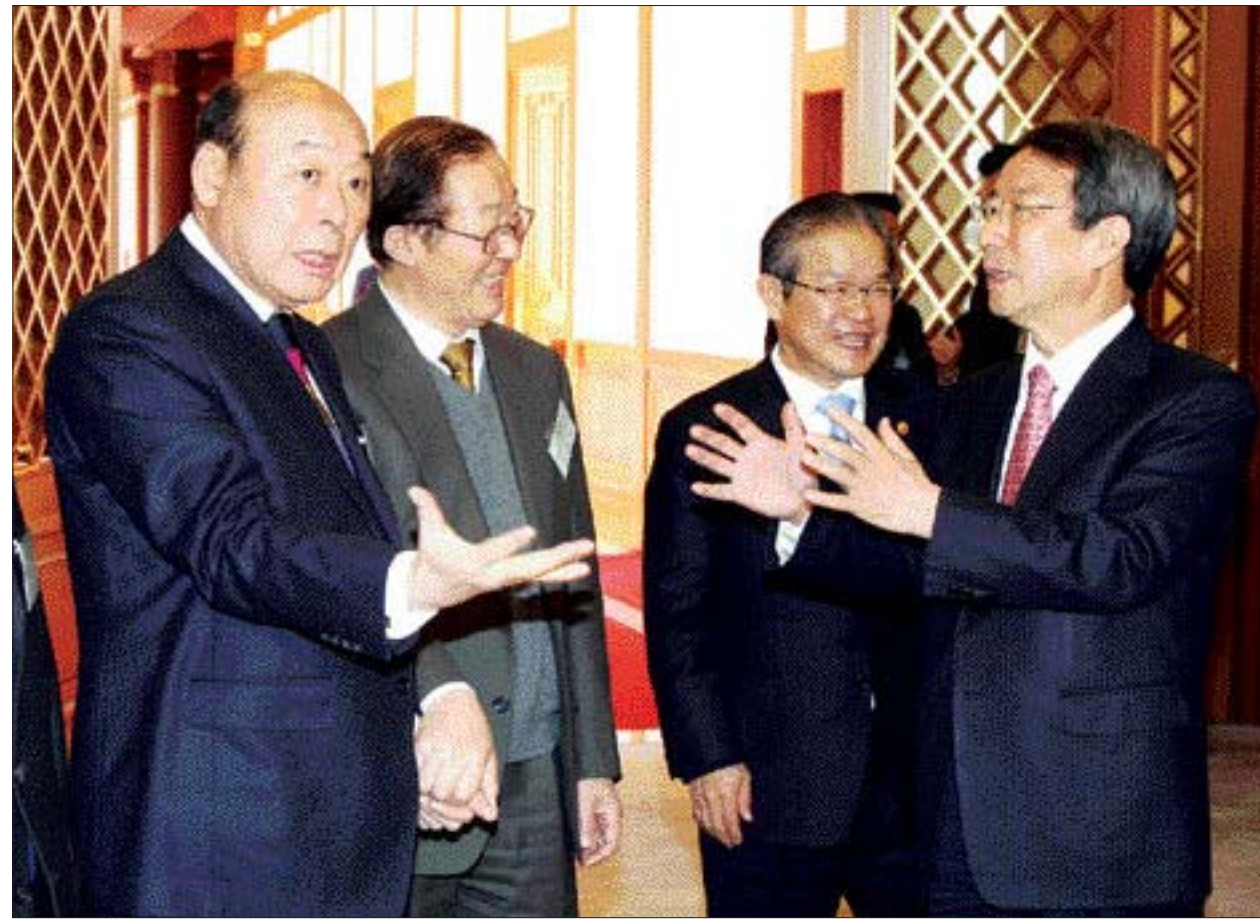
한나라당도 당 차원에서 14일 충남도당 국정보고대회, 19일 대전시장 국정보고대회를 열어 ‘충청권 설득’에 나섰다. 한편, 의원 개인 또는 그룹별로 충청지역을 방문, ‘각계각파’식 홍보전을 병행키로 했다.

▷중앙-지방권력 대결=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면서 중앙권력과 지방권력의 대결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서 김문수 경기도지사 등 수도권 자치단체장들은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일반적 찬성 입장을 밝혔으나 충청권을 비롯한 다른 지역 단체장들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나타냈다.

우선 영호남 지역 단체장들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이른바 ‘블랙홀’ 우려를 나타냈다.

박광태 광주시장은 “세종시 수정안이 교육과학경제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것인데 광주·전남과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고 말했으며, 김완주 전북지사는 “세종시 땅값이 과격적으로 낮아져 새만금 산업단지 분양가격에 대한 걱정이 많다”고 전했다.



박광태 광주시장이 12일 낮 청와대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 초청 시도지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정운찬 국무총리와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범일 대구시장도 “세종시에 다 가져가는 게 아닌가 하고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앞으로 충북이 세종시와 불가피한 경쟁을 겪고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고 지적했으며 박성호 대전시장도 “도시기능적 차원에서 대전이 축소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친박·아권 반발 지속=한나라당내 친박(친 박근혜)계는 12일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대립각을 유지했다. 특히, 친박 의원들은 수정안이 당론으로 결정되더라도 계속 반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며 ‘일선불사’도 각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야권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권의 ‘정략적 국론 분열정책’, ‘국가균형발전 포기정책’으로 몰아붙이며 반대 여론 확산에 주력했다.

자유선진당도 이날 오후 대전에서 ‘세종시 수정안 규탄대회’를 열고 충청 민심의 결집을 시도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첨단·녹색산단을 대기업 있을까

사업 중복...광주·전남 세종시 최대 피해

로 인해 관련 대기업들의 광주·전남지역 유치는 고사하고 부품 업체들도 끌어들이는 것이 불가능해 신재생에너지와 LED 등 신 성장산업의 배후 산단으로 조성된 지역내 특화산단까지 세종시 피해가 도미노처럼 번질 가능성이 높다.

나주의 빛가람 혁신도시내 산화원 클러스터의 경우 혁신도시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분양 성공이 전제돼야 하지만 세종시로 인해 직격탄이 예상된다. 클러스터 전체(36만178㎡)의 70.2%를

신재생에너지와 농식품산업으로 채울 계획이지만 세종시에 신재생에너지와 식품관련 업체가 입주하기로 한데다 비싼 분양가 부담을 안고 나주로 올 기업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LED 업종과 광산업, 첨단 부품소재 업종 유치목표로 내건 광주 첨단과학산단 2단계 부지는 이미 기업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있다. 50년 장기 임대용지(25만778㎡)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TH)가 지난 해 9월 분양 공고를 냈지만 아직까지 신청 업체가

없고, 분양용지(14만9천39㎡)는 3.3㎡당 68만원에 올 상반기 분양 예정이지만 입주 기업을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 혁신도시의 배후단지인 함평군 월야면과 광주시 광산구 삼가동 일대에 조성되는 빛그린산단도 올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조성 공사가 예정돼 있지만 세종시 여파로 조성되더라도 분양 성공을 장담하기 힘들다.

빛그린산단에는 광산업과 생물·의약, 신소재, 첨단부품 등 7개 전략산업 업종을 유치할 방침이지만 세종시 입주 기업들과 겹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빛가람혁신도시 건설지원단 관계자는 “세종시 여파가 단순히 기업유치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업종의 배후 역할을 하는 특화산단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나왔지만 국회 통과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야당과 지방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계획대로 세종시 수정안이 현실화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특별법·기업세금감면법 등을 위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 가지 법안을 개정해야 하지만 처리 고비마다 걸림돌이 놓여 있기 때문이다.

자치 법안 통과시기를 놓칠 경우 야에 수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시법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세종시법 처리를 위해서는 법률 개정안 작성→법제처 심사→입법예고→국무회의의 통과→국회 제출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기간만 최소 20일이 소요되는 등 2월 임시국회에 맞춰 법안을 제출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그럼에도 정부는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시도하겠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에서 법안 처리는 물론 한나라당 당론 변경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한나라당 당론(72조33항)은 당론을 변경하려면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친박근혜계는 60여 명. 그런데 박근혜 전 대표는 12일에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결과적으로 국민한테 한 약속을 어기고 신뢰만 잃게 된 것”이라고 비판하며 충청 여론의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반대 입장에선 변화가 없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그는 또 친이명박계의 ‘제왕적’이란 비판에 대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을 두고 제왕적이라고 한다면 제왕적이란 이야기는 100번이라도 들겠다”며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다. 때문에 친박계가 수정안 찬성으로 돌아갈 가능성의 희박해졌다.

어렵사리 당론을 변경하더라도 세종시 법안들이 해당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난망하다. 야당과 친박 의원은 물론 지방에 연고성 둔 의원들이 많아 법안처리가 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상황으로 4월 임시국회에서 세종시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세종시 수정안 자체가 실현되기 어려워진다는 점에 있다.

세종시 투자를 확정된 기업들은 대부분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성장 동력 사업 분야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세종시법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될 경우 기업의 신규투자나 연구개발 작업도 잇따라 연기되면서 투자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때문에 세종시 입주 확정 기업들은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세종시 관련법을 통과시켜주길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반대 여론이 점차 누그러질 6월 임시국회에서 또다시 세종시법 처리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라도 할 경우 법안 처리 동력을 야에 상실할 가능성도 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orea Jooyou Travel' (한국 조이 여행사) featuring various property listings with prices ranging from 98,000 to 1,249,000 won. The ad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and details about different types of properties available for sale or rent.